



2013년 국정감사 관세청/한국조폐공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류성걸 (대구 동구갑)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의원회관 607호 T. 02)784-3852 / F. 02)788-0269 / E. yoo575@hanmail.net

보도일시

2013. 10. 28.(월)~

담당자

관 세 청 : 손정갑 보좌관
조폐공사: 이영일 비서

[관세청]

▶ 관세청 AEO 공인 노력 부족하다

— 담당인력 태부족, AEO인증 수출입중소기업 비중은 20%에 불과해

☞ AEO 제도 도입이후 현재까지 476개 업체 공인, 지속적인 확대시행 필요

▶ 불법사이버 거래조사 역량 강화하자

— 관세사범 전년 동기대비 269%증가, 관세공무원이 꺼리는 사이버 조사업무

☞ 사이버 불법거래 최근 6년간 7.5배 증가하는데 반해 부족한 전담조직!

[한국조폐공사]

▶ 조폐공사, 공공기관 체면 지키고! 경제민주화에 동참해야!

— 중소기업 적압업종 등에 대한 배려 필요

☞ 생산라인 갯추고도 제품공정설계와 품질검사만, 주요 공정은 재하청!

☞ 주요 생산제품! 생산하면 할수록 적자! '12년 한해 영업손실만 123억원!

▶ GKD 언제까지 위망업? 본궤도에 진입할 때!

— 노동생산성 하락의 원인, 지속되는 당기순손실, 목표치 달성은 희망사항!

☞ 조폐공사 노동생산성 3년 연속 하락에 한몫 한 GKD!

▶ 갈수록 증가하는 직원 평균연령! 미리세대 육성해야!

— 직원 평균연령 46.1세, 40~50대 직원 비율 78%, 30대 미만은 2.5%!

관세청

관세청 AEO 공인 노력 부족하다

- 담당인력 태부족, AEO인증 수출입중소기업 비중은 20%에 불과해 -

□ 현황과 문제점

- 9.11테러 이후 2002년 미국이 최초 도입, 2005년 세계관세기구(WCO:World Customs Organization)가 국제물류 안전조치의 하나로 AEO를 국제표준으로 채택한 이후, 전 세계 60개국 도입('13년 9월 현재)

- 수출입인증기업에게 신속한 통관 혜택을 부여하는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가 미래에는 ISO(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인증을 대체하는 글로벌 무역환경의 바탕이 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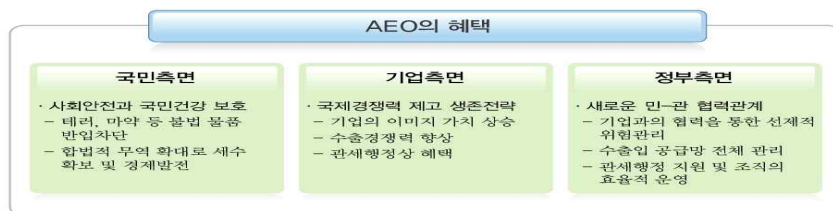
*AEO(종합인증우수업체): 과세당국이 안전관리기준 등 충족여부를 심사하여 공인한 업체. 해당 업체에게는 신속통관·물품 검사 면제 등 다양한 혜택부여

전 세계 AEO제도 도입국 현황 (총 60개국)

(2013. 9월말 현재)

구분	국가명	국가수	비고
AEO도입 (60개국)	한국, 일본, 중국, 태국, 인도, 이스라엘, 대만, 홍콩, 뉴질랜드, 요르단, 싱가포르, 말린	12	아시아 및 대양주
	미국, 캐나다,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멕시코, 도미니카, 페루, 아르헨티나, 과테말라	9	미주
	EU(28개국), 터키, 노르웨이, 스위스, 안도라, 산마리노	33	유럽
	케냐, 세네갈, 탄자니아, 우간다, 알제리, 잠비아	6	아프리카
AEO준비 (15개국)	몽골, 베트남, 인도네시아	3	아시아
	칠레, 엘살바도르, 브라질, 파나마	4	미주
	보츠와나, 모로코, 튀니지, 이집트, 르완다	5	아프리카
	마케도니아, 세르비아, 러시아	3	유럽

자료: 관세청



- (AEO 공인인증 확대노력 부족) AEO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4년째이며 전 세계가 AEO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관세청의 AEO 공인 확대 노력 등이 부족한 실정임

- 적정 AEO 공인 업체 수 비교

- 중국, 전체 수출입업체 수 중 약 0.44%*가 공인을 받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전체 수출입업체 수 중 약 0.15%**가 공인을 약 1/3 수준에 불과

* 중국 전체 수출입업체 약 54만개 중 2,377개를 AEO 공인

** 우리나라 전체 수출입업체 약 15만개 중 약 225개를 AEO 공인

AEO 공인업체수 중 부문별 중소기업 비중('13.9월말 현재)

구분	수출업체	수입업체	관세사	물류업체	계
공인업체	112 (27)	113 (20)	77	174	476개
비중(%)	24	18	16	36	100

자료: 관세청

- 세계적으로 AEO_MRA 체결이 증가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6개 국가와 AEO MRA를 체결하였지만 상대국으로 수출하는 우리업체에 대한 AEO 공인 실적은 저조

* MRA 체결국가 수 : 미국(7개) > 한국, 일본(6개) > EU(5개) > 싱가포르, 캐나다(4개)

** MRA(상호인정약정: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자국 AEO와 상대국 AEO를 동등하게 인정하는 협정으로, 체결 시 상대국의 AEO 수출물품에 대한 검사생략 등 혜택 부여

- 연간 수출 실적 150만불을 수출하는 기업 중에 현재까지 공인받은 업체 수는 7.8%, 중소기업은 2.1%

AEO_MRA 체결한 6개국 대상 수출업체 현황

MRA국가로 수출업체	구분	전체	중소기업
	전체	1,128	466
	AEO (수출)	88	10
	AEO 비율(%)	7.8	2.1

* 수출건수 50건, 수출금액 150만\$ 이상 업체, 자료: 관세청

- (AEO MRA 추진) 상대국 AEO 제도가 통관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MRA를 통해 수출업체의 비관세장벽 해소는 매우 중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3명의 인력으로 6개 MRA 체결국가에 대한 사후관리와 함께 추가적인 협상을 지속해야 하는 실정임.

- 멕시코, 홍콩과 MRA 협상을 본격화하는 등 주요 교역국과 동시다발적 협상 추진 중
- MRA를 체결하였더라도 IT 문제 등을 이유로 한 미 이행 등 문제가 있어 계속적인 후속조치가 필요

AEO MRA 추진 현황(2013. 9)

체결	(6)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10)/일본, 뉴질랜드('11)/중국('13)
협상 진행	(6)	멕시코, 인도, 홍콩, 말레이시아, 이스라엘, 터키

○ (중소기업 지원 미흡) 중소기업현재 우리나라 AEO 공인업체수는 476개(2013년 9월 현재)이며, 이 중 중소기업은 256개로 산업구조(전체 기업의 99%가 중소기업)를 고려해 비교하면 중소기업의 비중이 현저히 저조함. 그나마 이루어지고 있는 중소기업의 AEO 인증 또한 대기업의 필요에 의해 대기업 협력업체 위주로 이루어지는 실정임.

* AEO 공인 획득 기업: 대기업 220, 중소기업 256

- 중소기업의 AEO 인증이 대기업의 vendor업체(대기업 유관업체) 위주로 받는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함

*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대기업들도 중소 수출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협력업체가 공인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두산인프라코어(주)의 중소협력업체 97개 업체를 대상 공인인증 지원

AEO 관련 중소기업지원 현황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비고
지원예산	6억원	9억원	9억원	
지원범위	컨설팅 비용	컨설팅 비용(8.2억) 교육비(0.8억)	컨설팅 비용(8.3억) 교육비(0.7억)	
지원금액	수출 1,100만원 (수입병행 1,815만원) 물류·관세사 946만원	수출 2,240만원 물류 1,000만원	실제 컨설팅 평균 비용 (2,800만원)의 80%까지 지원 확대	
	교육 -	업체당 60만원 (192개업체, 305명)	업체당 60만원 (85개업체, 146명)	공인 전(2일) 30만원 공인 후(1일) 20만원

자료:관세청

○ (관세청 담당인력 부족) FTA와 더불어 AEO MRA가 무역증진을 위한 양대 축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관세청은 여전히 2010년~2011년 수준의 인력으로 AEO제도를 운영. 인력과 조직의 변화 없어 수요 급증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중국과의 MRA 체결 등에 따라, AEO 공인을 받으려는 기업 폭증 예상

* 중국 수출입업체 AEO 공인비율(0.44%)을 참고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입업체 435개('13.9월 말:225개 → 미래:660개) 추가 공인 검토

- AEO 갱신(종합)심사 대상업체 대폭 증가

· 공인유효기간(3년) 경과업체에 대한 갱신(종합)심사, 2014년에는 약 122개('13년 대비 126%), 2015년 219개('13년 대비 306%) 증가 예상

AEO 공인업체 및 갱신(종합)심사업체 예측

(업체수 기준, 단위 : 개)

연 도	'09	'10	'11	'12	'13	'14	'15	'16
공인업체	12	48	72	171	200	150	150	150
갱신(종합)심사업체	-	2	8	32	54	122	219	180

자료: 관세청

AEO 업무 담당 인력 현황

구분	AEO 센터		공인심사	갱신(종합)심사 (기업상담전문관)	계
	AEO 심사	AEO MRA			
'09년	5	5	9	(8)	27
'10년	5	5	24	25(17)	59
'11년	5	5	24	25(17)	59
'12년	5	2	26	25(21)	58
'13년	5	3	24	22(15)	54

자료: 관세청

○ (기업상담전문관 운용 부실 우려) 기업상담전문관(AM)의 관리업체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 2013.9월 기준, AM은 15명으로서 1인당 평균 34개의 AEO 공인업체를 관리·지원하고 있어, 부실상담에 대한 우려가 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담당 업체수가 지속 증가하는 추세임.

- 2014년 이후 AM 1인당 44개 업체 이상을 관리하게 되므로 AEO 모니터링, 범규 준수도 향상, 위험분석 및 정보제공 등 본연의 업무를 충분히 수행하지 못할 우려

AEO 공인업체 및 기업상담전문관 업무량 예측

(업체수 기준, 단위 : 개)

연 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공인업체	12	48	72	171	200	120	120	120
공인업체 누적	12	60	132	303	503	653	803	953
AM 수	8명	17명	17명	21명	15명	-	-	-
AM 1인당 관리업체수	1.5	3.5	7.8	14.4	34	(44)	(54)	(64)

* () : AM이 현황과 같이 15명인 경우 추정치, 자료:관세청

□ 질의 및 제언

○ (AEO 공인인증 노력 부족)

질의 1) AEO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4년째이며, 전 세계가 AEO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관세청의 AEO 공인 확대 노력은 부족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2012년 167개 업체 승인완료, 2013년 9월말 현재 110개 업체 승인완료

질의 2) 전체 수출입업체 수 중 약 0.44%가 공인을 받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전체 수출입업체 수 중 약 0.15%(15만개 중 225개 업체)가 공인을 약 1/3 수준에 불과함.

우리나라 전체 수출입업체 약 15만개 중 어느 정도가 AEO 공인 대상이라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AEO_MRA)

질의 3) 세계적으로 AEO_MRA 체결이 증가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중국을 비롯한 6개 국가와 AEO_MRA를 체결하고 있으며, 멕시코를 중남미 교역의 교두보로 판단 2014년까지 양국 간 AEO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기존의 체결국가에 대해서는 AEO 혜택부여 여부 등 후속조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하며, 새로 협정체결을 추진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방대한 자료를 취합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현재 관세청의 MRA 전담 인력은 몇 명인지?

질의 4) 멕시코와의 AEO_MRA 체결 진행상황은 어느 수준까지 와 있으며, FTA를 체결한 EU의 경우 아직까지 AEO_MRA를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언제쯤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5) 최대교역국인 중국과 AEO_MRA가 맺어지면서 우리나라 AEO공인기업의 수출물품에 대한 비관세장벽이 없어지는 결과를 얻었음.

무역거래 규모로 볼 때 중국만을 위한 별도의 AEO_MRA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향후 대책은?

○ (중소기업 지원 미흡) 관세청에서는 9월 현재 AEO 공인업체수 476개 중 256개 업체가 중소기업이라는 답변을 하고 있음.

질의 6) AEO 공인업체 중 관세사와 물류업체를 제외한, 수출업체와 수입업체 225개 중 중소기업은 47개로 전체 수출입 업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에 불과한 실정임.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책은 ?

질의 7) 그나마 AEO 공인 중소기업은 대부분 대기업의 vendor업체(대기업 유관업체)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대기업과 연계해 AEO 인증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에서 각종 교육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이들 기업은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세청이 정책적인 지원을 하는 반면,

* AEO 특성 상, 제품의 제작과정을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 등의 전제 조건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완제품의 일부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지원은 필연적인 것임

대부분의 역량을 대기업과 연계가 되어 있지 않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관세청 담당인력 부족)

질의 8) 한중 AEO 상호협정체결 등에 따른 AEO 공인신청의 증가, 사후관리 업무 증가, 멕시코 등 전략적으로 추진 중인 AEO_상호인정협정 등의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2009년 이후 정제되어 있는 AEO 제도 담당 인력을 현재보다 대폭 늘려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임.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책은?

○ (제언) AEO 제도 도입이후 9월 현재까지 476개 업체를 공인하는 등 이제는 어느 정도 정착·안정화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됨. 올해에는 이 같은 여세를 몰아 지속적으로 AEO 공인을 확대하고, 더불어 AEO제도 내실화를 통한 실질적인 효과 창출에 주력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불법사이버 거래조사 역량 강화하자

-관세사범 전년동기대비 269%증가, 관세공무원이 꺼리는 사이버조사업무-

□ 현황과 문제점

- 사이버 불법거래는 전자상거래를 이용하여 물품을 불법적으로 수출입하거나, 외국으로부터 불법 반입된 물품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최근 전자상거래의 확대와 지능화된 불법거래로 사이버 감시활동 강화가 요구되고 있음

- 전자상거래를 통한 거래와 인터넷 쇼핑몰 규모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 거래 물품도 의류, 전자제품 등 공산품 위주에서 의약품·식품·일반생활용품 등 전 품목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 전자상거래 규모 : '10년(824조) → '11년(1,000조) → '12년(1,147조원)
▶ 인터넷 쇼핑몰 규모 : '10년(25.2조) → '11년(28.6조) → '12년(34.1조원)
* 자료 : 통계청

- 무선인터넷의 발달,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의 보급 등 환경의 변화로 익명성이 보장되고 전파성이 더욱 강한 범죄행태로 변화하고 있음

- (관세사범 단속급증) 사이버 밀수거래 단속 현황을 보면, 2013년 9월 현재 375건에 2,583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건수와 금액이 각각 5%, 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관세사범의 경우 256건 1,224억원으로 건수로는 33%, 금액으로는 269% 증가하였음. *관세사범 2012년도 9월 기준 193건 332억원

- 마약사범의 경우 2012년 9건 0원(5천만원이하) ⇨ 2013년 7건 1억원으로 적발건수는 줄었으나 금액으로는 99% 증가(단, 금액의 총규모가 미미함)

사이버 밀수거래 단속실적

(단위 : 건, 억원, %)

구 분	2011		2012		2013. 9월		전년동기대비증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관 세 사 범	283	716	304	602	256	1,224	33%	269%
지 재 권 사 범	188	5,669	181	6,234	86	1,250	△37%	△74%
대 외 무 역 사 범	26	470	14	506	7	32	△13%	△74%
마 약 사 범	15	0	11	0	7	1	△22%	99%
외 환 사 범	68	143	64	141	19	76	△60%	33%
합 계	578	6,998	574	7,483	375	2,583	△5%	△51%

※ 지재권사범, 대외무역사범, 마약사범, 외환사범은 감소 추세

〈자료:관세청〉

※ 관세사범의 경우 자동차시트 부분품 부정환급(740억원, 7.25) 적발로 전년동기 대비 금액 269% 증가하였음.

- (사이버 단속의 한계) 사이버 범죄는 주로 타인명의도용, 대포통장과 해외에 있는 서버를 이용하는 등 범죄수법이 지능화되어 혐의자 추적 및 범죄를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 확보에 어려움

- 또한 무선인터넷의 발달,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의 보급 등 환경의 변화로 익명성이 보장되고 전파성이 더욱 강한 범죄행태로 변화하고 있음

- 초기에는 네이버 블로그나 G마켓 등을 이용한 사이버 물에서 판매가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블로그 등은 연락처 교환하는 장소로 이용하고 실제 판매는 별도의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등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음

- (사이버 전담조직 부족) 관세청에서 사이버 전담조직은 서울 세관 '사이버조사과'가 유일하며, 부산세관 조사1관(11명), 인천세관 조사2관 2계(4명)은 일반 조사업무와 사이버 조사업무를 겸하고 있는 등 사이버 밀수에 대한 관세청의 관심이 부족한 실정임.

- 사이버 전담조직 근무 기피 현상 심화 (사이버 조사는 IP추적 등 특수한 전문적 조사 기법이 요구되며, 익명의 혐의자 특정에 상당기간 소요로 조사기간 장기화되어 성과평가 및 포상에 있어 타 부서에 비하여 상대적 불이익)

- 정보수집분석 및 사이버 수사기법 개발 부재로 전문 수사 조직으로 발전에 한계

□ 질의 및 제언

- (사이버 불법 거래의 증가) 사이버 불법거래 단속현황을 보면, 2007년 995억원, 2008년 2,053억원, 2009년 4,998억원, 2010년 4,691억원, 2011년 6,998억원, 2012년 7,483억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였음.

질의 1) 특히, 2007년 995억원에서 2012년 7,483억원으로 7.5배 증가하였음.
그러나 2013년 9월 현재 2,583억원으로 급격히 줄어들었는데,
금융위기 당시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사이버 불법(밀수)거래가
이처럼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이버 전담조직) 전자상거래 규모가 2010년 824조원, 2011년 1,000조원, 2012년 1,147조원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인터넷 쇼핑물 규모 또한 2010년 25.2조원, 2011년 28.6조원, 2012년 34.1조원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임.

질의 2) 사이버 거래규모(전자상거래+인터넷 쇼핑물)는 2010년 849.2조원에서 2012년말 기준으로 1,181.1조원으로 증가하였음. 그에 따라 사이버 불법(밀수)거래 적발 규모도 증가하였으나, 관세청의 조사인력은 31명에 불과함

그나마 전담인력은 15명 수준이며 나머지 16명은 일반조사 업무와 겸직하는
요원임을 감안할 때, 사이버밀수에 대한 관세청의 관심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질의 3) 사이버조사 업무의 경우 관세청 공무원이 담당하기를 꺼려하는 대표적 업무임.
업무의 특성상 IP추적 등 특수조사기법이 필요하고, 사건해결에 장기간이 소
요됨에 따라 성과평가 및 포상에 있어 타 부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주어진다는 것이 그 이유임.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향후 대책은?

질의 4)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전담 요원을
확보하여 정보 분석 전담반을 설치하고 실시간 수사체제 구축해야 한다는 전
문가들의 지적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민관 협력 강화) 관세청은 현재 상표권자, 인터넷 쇼핑몰 운영업체(25개) 등과 협력을
강화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민관 합동 인터넷 모니터링을 실시 등 합동단속 체제 구축
운영하고 있음.

질의 5) 현재 운영 중인 민관 합동단속 체제는 그 실적이 미미한 실정임.
최근까지 주로 모니터링과 간담회 등의 방식으로 협력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
는데, 보다 구체적이고 중장기적 활동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제언) 사이버 거래규모의 증가추세에 발맞추어, 사이버 불법(밀수)거래 감시 인력과
시스템을 재편할 필요가 있음. 이와 함께 민관의 실질적인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불법식품, 마약, 재산도피 등 사이버 범죄 전체를 관리할 수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이버 조사 역량 대폭 강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해외에 서버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해외 공급자, 국내 배송책 등 국제조직 범죄를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외국 세관과 협력체제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폐공사, 공공기관 체면 지키고! 경제민주화에 동참해야!

-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한 배려 필요 -

□ 현황과 문제점

○ 조폐공사는 최근 3년간 주화, 메달, 훈장 등 압인제품과 관련하여 정부부처 및 기관으로부터 6건, 기업 등 민간으로부터 3건의 사업을 수주했으며 총 매출액은 3,750억 원임

- 국내주화는 한국은행과 쌍방독점 계약으로 매출규모는 최근 3년간 2,488억 원 수준
- 훈장은 안전행정부로부터 수의계약의 입찰방법으로 매출규모는 최근 3년간 141억 원 수준임

한국조폐공사

〈최근 3년간 주화/훈장/메달 등 압인제품 수주사업내역〉

연도	제품별	발주처	입찰방법	매출액 (억원)	생산방식		비고
					자체	하청	
'10	국내주화	한국은행	쌍방독점계약	759	○		기념주화 포함
	해외주화	I 국	경쟁입찰	25	○		
	훈장	안전행정부	수의계약	43	○		일부공정 외주
	메달	현대자동차등 24개 업체	수의계약 경쟁입찰	247	○		일부공정 외주
'11	국내주화	한국은행	쌍방독점계약	1,026	○		기념주화 포함
	해외주화	I 국	경쟁입찰	35	○		
	훈장	안전행정부	수의계약	43	○		일부공정 외주
	메달	현대자동차등 22개 업체	수의계약 경쟁입찰	307	○		일부공정 외주
'12	국내주화	한국은행	쌍방독점계약	703	○		기념주화 포함
	해외주화	I 국, T 국	경쟁입찰	152	○		
	훈장	안전행정부	수의계약	55	○		일부공정 외주
	메달	현대자동차등 28개 업체	수의계약 경쟁입찰	355	○		일부공정 외주

자료: 한국조폐공사

○ (생산라인 갖추고도 재하청) 지난 9월, 참전 유공자 호국영웅기장 제작(18만개)과 관련한 입찰 당시 조폐공사 외 11개 중소기업이 입찰에 참여했으며 조폐공사가 낙찰(낙찰가액: 약23억 원)을 받음. 그러나 제품의 디자인과 공정설계 그리고 조립과 품질검사만 실시하고 실제 생산관련 공정은 6개 업체에 재하청 한 것으로 드러남.

- 조폐공사는 공개입찰 과정에서 일부 업체가 단가를 낮게 제시 했지만 적격성 부분에서 불합격 되었다고 밝힘.
- 조폐공사는 이번 사업의 경우 국가사업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납품기준과 품질인증능력 제반 시스템을 갖춘 부분이 낙찰의 주된 요인이라고 분석함.

〈각 구성품별 업체 분담 내역〉

업 체 명	관련 작업	비 고
한국조폐공사	디자인, 제품-공정설계 및 금형 제조	자체 수행
OO메달	지급받은 금형에 의한 압사타발 등 작업	한국조폐공사로부터 제조 기법 등 기술전수 및 품질지도에 따라 작업
OO트로피	케이스	공사 설계규격에 따라 전문업체 인쇄
OO인쇄	보증서	공사 설계규격에 따라 전문업체 인쇄
OOO직업 재활센터	골판지 상자	공사 설계규격에 따라 전문업체 인쇄
한국조폐공사	품질검사 및 조립·포장	자체 수행

○ (생산할수록 적자) 조폐공사는 연간 약 3만조의 훈장을 생산하여 안전행정부에 납품해 왔으나, 훈장사업 개시 이후 지난 '12년 까지 누적적자 △127억 원 발생, 최근 3년간 영업 손실 규모는 평균 4억 3천만 원이며 특히 지난 '11년에는 원재료 가격 급상승으로 인해 연간 8억 원의 영업 손실이 발생됨.

〈안전행정부 납품 훈장 손익현황〉

구분	단위	2010	2011	2012
수량	조	30,990	30,849	33,593
판매금액	백만원	4,327	4,273	5,544
총원가	백만원	4,564	5,095	5,786
영업손익	백만원	△237	△822	△242

※ 2011년 822백만 원의 적자는 훈장 주재료인 은 가격의 급상승으로 인함
(은가격 인상 전년 대비 그램당 678원에서 1,493원으로 120% 급상승)

- 지난 5년간 조폐공사의 주요생산제품의 영업손익 현황에 따르면 기념주화, 훈장, 기타압인, 수출제품은 거의 매년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고 '12년의 경우 영업손실이 약 123억 원에 달함

〈2008~2012년 주요 제품별 영업손익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08년도		'09년도		'10년도		'11년도		'12년도	
	매출액	영업손익	매출액	영업손익	매출액	영업손익	매출액	영업손익	매출액	영업손익
은행권	132,052	2,250	125,676	△1,121	85,046	17,117	87,579	18,319	78,535	△2,721
기념주화	5,793	△460	2,424	△817	6,761	△1,128	6,833	△1,387	15,241	△1,661
증지류	1,991	355	2,097	283	2,001	△41	1,676	65	1,293	△69
훈장	3,805	△187	3,898	△224	4,327	△237	4,274	△822	5,544	△243
기타압인	10,085	113	19,101	△15	24,661	395	30,723	△1,754	35,473	△1,532
수출제품	31,096	△3,904	42,113	663	32,809	△8,396	13,068	△8,962	42,779	△6,030

□ 질의 및 정책제언

○ (조폐공사의 적격성 운운? 결국은 재하청) 조폐공사는 지난 입찰 과정에서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가 있었으나, 해당 사업의 적격성 등에서 조폐공사의 낙찰이 불가 피했다는 입장임. 그러나 재하청 하는 과정에서 통행세만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향후 입찰과정에서는 경제민주화에 부응하여 중소기업 적합업종 등을 고려 하는 국가 공공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며 생산 할수록 영업손실 규모가 커지는 품목의 생산 등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가 필요할 것임.

질의 1) 조폐공사가 훈장, 기념메달 등의 압인제품 생산과 관련한 입찰에서 낙찰 받은 건수가 연간 얼마나 되는지?

질의 2) 압인제품 생산과 관련한 장비, 기술 등 생산 라인의 수준은 어떠한지?

질의 3) 지난 9월 안전행정부가 참전유공자 훈장제작과 관련한 입찰에 조폐공사가 참여할 당시 몇 개 업체가 참여했는지?

질의 4) 당시 적격성 등을 이유로 낙찰을 받았다면 조폐공사의 장비와 기술 등으로 생산이 가능 했다고 봐야 할 것인데 사실상 제품디자인, 공정설계, 조립 및 품질검사만 조폐공사에서 실시했고 대부분의 공정은 재하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음. 이 부분에 대해 설명바람.

GKD 언제까지 워밍업? 본궤도에 진입할 때!
 - 노동생산성 하락의 원인, 지속되는 당기 순손실, 목표치 달성은 희망사항 -

정책제언) 정부 그리고 국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경제민주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이는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 보호하자는 취지이고 중소기업이 자생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일 것임. 물론 공사로써 수익창출이 불가피함은 인정되나 중소기업 적합 업종 등 소규모 사업은 영세기업과 자영업자를 먼저 배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국가 공기관으로서 윤리경영을 해나가야 할 것임.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앞으로는 중소기업의 일감을 가로챘거나 낙찰 이후 다시 재하청 하는 방법으로 이윤을 남겼다는 등의 의혹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현황과 문제점

○ (노동생산성 하락의 원인 GKD) 조폐공사의 최근 3년 간 노동생산성은 다소 하락세 ('10년 116백만 원/ '11년 114백만 원/ '12년 105백만 원)를 보이고 있는데 주요 원인은 자회사 GKD의 손실분이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에 반영된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 노동생산성은 “부가가치 / 평균인원”이며 부가가치의 구성 중 하나인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별도재무제표 상 법인세차감전순이익과 종속기업에 대한 보유지분만큼 순이익 금액을 반영하여 산출 함

- '10년도 설립한 공사 자회사인 GKD는 공사가 6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설립 이후 안정화 지연으로 순손실이 발생했고 GKD의 순손실 효과가 지분법 평가로 반영되어 노동생산성 하락폭이 커짐

(단위: 백만원)

구분	2011년		2012년	
	공사	GKD	공사	GKD
별도 순이익	6,458	△2,377	1,270	△4,107
합계 순이익	4,081		△2,837	

※ 지분법 평가는 2011년부터 실시

〈법인세 금액 차감 전후 순이익 현황(별도재무제표 기준)〉

(단위:백만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법인세 차감전	7,231	6,458	1,270
법인세	3,708	3,257	791
법인세 차감후	3,523	3,201	479

○ (지속되는 손실과 목표 달성의 어려움) 최근 3년간('10~'12) GKD의 영업손실은 연간 113만 불, 당기순손실 308만 불이며 '13년 3분기 기준 333만 불의 손실이 발생됨

〈GKD 연도별 손익현황〉

(단위:천\$)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3분기
당기순이익	△365	△2,723	△6,136	△3,330
외화환산손익	△33	△1,863	△3,017	△2,539
환산손실비중	9%	68%	49%	76%
영업이익	△425	△725	△2,237	36
기타손익	93	△135	△882	△827

- (목표치 절반의 실적치) '13년도 분기별 계획대비 생산 및 판매현황에 따르면 생산량은 3분기 연속 목표치의 50%(1분기 53.3%/ 2분기 50.4%/ 3분기 51.3%) 수준에 불과하며 판매수량은 목표치 대비 46% (1분기 38.4%/ 2분기 50.4%/ 3분기 51.3%), 매출액 역시 55%(1분기 46%/ 2분기 62%/ 3분기 56%)에 그쳐 전반적으로 목표치 대비 실적치가 부진한 실정임

〈2013년도 GKD 분기별 계획대비 생산 및 판매현황〉

(단위: 톤, 천\$)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생산량	1,800	960	2,800	1,412	3,450	1,770
판매수량	2,400	921	3,000	1,340	3,450	1,765
매출액	4,044	1,855	5,638	3,502	7,300	4,080

※ 상반기 판매목표 중 손품 800톤 포함

○ (GKD 부진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마련 시급) '11년 면펄프 생산을 위한 설비보완을 완료하고 GKD 관리지원반을 파견하여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으나, 각종 설비와 장비의 성능미달, 시운전 결과 미흡, 금융비용 상승(외화자산 손실 과다, 우즈벡의 환율상승으로 인한 외화환산손실), 국제 면화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운 실정임

- GKD 대표교체, 종합감사, 직원징계, 인력 및 조직슬림화 등 경영개선 및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조속한 생산 회복을 위한 적극적이고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 향후 출자 시에는 투자의 타당성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사전분석과 검토가 필요할 것임

- 외화환산 손실은 '12년도 당기 순손실의 50% 수준

〈외화 손실현황〉

(단위: 천USD, %)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상반기
외화환산손	33	1,912	3,017	1,664
손실 비중	9.0%	70.2%	49.2%	57.9%

□ 질의 및 정책제언

○ (GKD 성과부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마련 필요) 지난 '11년 면펄프 생산을 위한 설비보완을 완료하고 GKD 관리지원반을 파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으나, 금융비용의 상승, 국제면화가격 하락 등이 손실의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과 조치가 필요 할 것임.

질의 1) 조폐공사의 노동생산성이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하락('10년 116백만 원/ '11년 114백만 원/ '12년 105백만 원) 하고 있음. 이에 대한 주된 요인 중 하나가 GKD의 손실 반영 때문으로 보이는데 사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질의 2) '10년 이후로 GKD의 영업손실은 연평균 113만 불, 당기순손실은 308만 불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속되는 손실의 주된 원인은 무엇으로 보고 있는지?

질의 3) '13년도의 목표치 대비 실적치에 따르면 생산량, 판매수량 전반에 걸쳐 50%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 원인은 무엇이며, 또한 당초 목표치를 설정할 때 외부 요인 등 예측 가능한 변수들에 대한 고려, 그에 따른 대책마련 등 좀 더 구체적인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향후 대책은?

정책제언) 조폐공사는 GKD의 실적부진 원인 등에 대해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환율 상승 정책으로 인한 외화환산의 손실과다, 국제면화가격 지속적 하향 등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음. 물론 외부 요인도 무시 할 수 없지만 보다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분석을 통해 이를 극복하고 당초 GKD설립 취지에 부응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임.

갈수록 증가하는 직원 평균연령! 미래세대 육성해야

- 전문인력 확충 및 육성, 청년고용 확대로 신성장동력 창출해야 -

□ 현황과 문제점

-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인력 확충문제) 조폐공사는 새로운 성장엔진의 발굴을 위해 미래사업 인큐베이팅 전담조직 확대, 미래성장 전담조직 확대개편, 기관 산하의 기술 연구원 조직개편(2실 3센터 6팀)등을 단행했으나, 기존의 인력이나 장비 등에 대한 개선은 미비함에 따라 구체적인 전문 인력 수급 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6개 조직(1원 2실 3센터) → 5개 조직(1원 1실 3센터) : 1개 조직 감축
 - 생산기술연구실 + 위조방지센터 → 위조방지센터

〈조직개편 현황〉



- (해외사업 위한 전문 인력 확보해야) 해외사업 확충을 위해 5년간 전문 인력 6명을 채용했으나 단기적인 대응 외에 장기사업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수급계획이 필요할 것임

〈해외사업 전문 인력 확충 및 구성〉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10.
인원(명)	-	-	1	5	-
분야	-	-	해외마케팅	해외마케팅	-

- (공사의 평균연령 46세, 미래세대 수급필요) 조폐공사는 화폐수요 감소 등에 따라 ID 사업, 해외사업 등 신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에 착수했으나, 그에 따른 전문 인력 수급의 미비, 직원의 높은 평균 연령(46세), 78%에 달하는 40~50대의 퇴직에 대한 기술전수 등 대비책 마련 미비 등이 문제가 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할 것임

- (비교적 적은 정규직 채용) '09년 이후 정규직의 신입채용이 소폭 증가했으나, '12년 기준 기간제 근로자 채용인원의 18% 정도 수준이며 직원 평균연령이 46.1세로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음.

· 50대 직원 589명(42%), 40대 직원 498명(36%), 30대 직원 272명(19%), 30대 미만 35명 (2.5%)

- 청년의 고용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에 따른 정원의 3% 이상 고용권장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11년 27명 1.8%/ '12년 32명 2.2%/ '13년 29명 2.0%)임.

〈최근 5년간 고용현황 있음〉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정규직	경력	-	-	-	2	3
	신입	6	4	14	22	11
기간제 근로자	경력	-	-	-	-	-
	신입	316	85	49	118	54

〈직원 평균 연령 있음〉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평균연령	43.7	44.3	44.9	45.4	45.9	46.1

〈연령대별 직원현황〉

구분	30대 미만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합계
2009	88	407	517	519	1	1,532
2010	48	406	469	553	1	1,477
2011	27	364	445	600	1	1,437
2012	32	315	461	613	1	1,422
2013	35	272	498	589	1	1,395

- (퇴직인원 집중으로 인한 기술공백) 공사직원의 78%가 40~50대에 편중되어 연도별 퇴직으로 인한 기술공백의 우려가 있음. 장기적 관점에서 중장기 기술 전수계획은 마련되어 있으나 그에 따른 구체적인 채용 계획이 미비한 실정임

질의 1) 화폐의 사용량 감소에 따른 조폐공사의 신성장 동력 개발은 시대의 요구라고 할 수 있음. 향후 해외사업, ID 사업 등 이른바 미래사업으로 변화를 이뤄야 하는 시점에서 구체적인 인력운용 및 수급 계획의 미비는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질의 2) 공사의 평균 연령이 46.1세로 비교적 높다고 볼 수 있고, 특히 40대~50대의 비중이 전체직원의 78%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신입채용의 경우 대부분이 기간제 근로자이고 장기적으로 공사의 신성장동력을 이끌어 갈 인력의 채용이 다소 미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질의 3)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르면 정원의 3% 이상 고용을 권장하고 있으나 공사의 경우 '12년 2.2%, '11년 1.8% 정도의 수준인데 특히, 공사의 대졸 청년인턴의 정규직 전환이 지난 한 해 5명 정도에 불과함. 인턴과정을 통해 체계적인 교육을 거친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공사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정책제언) 조폐공사의 주력 사업인 화폐발행이 최근 신용카드사용 증가와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ID사업, 해외사업 등 새로운 성장엔진 발굴에 힘써야 할 것임. 그에 맞는 인력과 전문성을 갖추어나가기 위해서는 현재 직면하고 있는 조폐공사 직원의 다소 높은 평균연령 문제, 전문 인력 확충 문제 등을 해결 할 장기적인 비전과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또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서 권장하고 있는 청년고용 3%를 준수하는 것 또한 미래세대를 영입하고 조폐공사의 내일을 준비하는 초석이 될 것임. 뿐만아니라, 40~50대 직원의 비중이 78%에 달하고 있어 머지않아 발생될 퇴직자의 증가에 대비한 기술전수 등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됨.